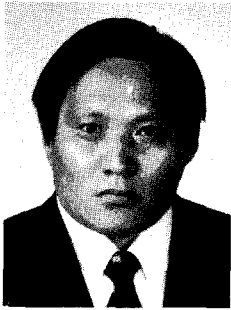


# 정치로비시대의 농민단체 대응방안



서기원

농협대학 교수

## 1. 머리말

어느 나라나 그 사회에는 각계 각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상업은 상업대로, 또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각기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농업분야도 이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 이해집단간의 이해(利害)는 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다. 기업과 노동조합, 기업과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타산업과 농업부분간의 이해대립 등이 그것이다.

이때 이를 조정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은 정부뿐이다. 물론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의 대부분은 정부가 수립, 집행하는 정책여하에서 비롯된다.

즉 정부가 어떤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때, 어느 한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면 다른 관련집단의 이익은 희생될 수 밖에 없고, 그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집단은 집행해 나가려는 그 정책의 수정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각 이해계층은 자기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게 된다.



물론 각 이해계층이 그들의 조직체를 갖게 되는 것은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구성된 상호간의 친목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에서부터 합리적 경제활동을 위한 상호지원, 정보교환,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의 수행 등 다양한 지원과 협동활동을 해나가는 것까지 여러가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에서 말한 기능을 정치적 기능이라 한다면 뒤에서 열거한 기능들은 사회적, 경제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각 이해집단의 조직체는 그 어느 것이나 최소한 이 세가지 기능은 모두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정치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구성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더라도 그것이 정책집행을 잘못된데서 결과한 불이익보다 클 수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책여하는 각 이해집단의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한 실례(實例)를 우리는 농업정책, 농촌정책에서 처절하게 맛보았다. 산업정책, 무역정책, 재정 및 금융정책, 경제성장정책, 그 어느 분야에 있어서

도 농업, 농민은 언제나 불이익을 입어왔으며, 그 결과로, 농민은 자신들은 물론 농민단체들의 꾸준한 자기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업, 농촌, 농민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일이 일찌기 없었음을 실감한다.

따라서 각 농민단체들은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기능의 올바른 수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농민단체들은 그들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어떤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가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

## 2 농민단체가 정치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농축산물생산은 거의 대부분 과소생산의 시기였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의 농업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그 대부분의 노력을 농축산물증산에 투입하였다. 수출을 해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농축산물의 생산부족은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그러면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가져오므로 이것은 우리나라 공산품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에서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농축업이 상업농시대로 진입하고 그에 따라 농축산업기술도 크게 향상되어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과잉생산을 맞이한다.

때를 같이하여 경제정책의 제일의 목표는 물가안정에 두어졌다. 그런데 이 물가안정정책이 유감스럽게도 통화량의 조절을 통해서보다는 농축산물가격의 억제제를 통해서 주로 추진되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수출의 급격한 신장과 더불어 우리의 수출시장비중이 40%나 되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농축산물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력을 가중시켰다.

그리하여 물가안정이라는 명분과 농축산물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을 피할길이 없다는 명분의 두가지가 겹쳐 농축산물수입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왔으며, 그 결과 농축산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어떤 농축산물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면 방치하고 반대로 과소생산으로 그 품목의 가격이 폭등하면 수입으로 그것을 억제해 오기 8~9년을 지속해온 것이다. 그리고도 농축산업이, 농민이 어려운 처지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하지 않은가.

오늘의 농업, 농민이 곤경에 빠진 것은 바로 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의 경제정책이 성장위주, 능률중심, 대기업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등에만 치중한 나머지 농업과 같이 저성장, 저능률 부문은 경시(輕視)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80~87년 기간중 농가소득은 겨우 2.4배 밖에 늘지 않았는데, 농가부채는 같은 기간에 무려 7배나 늘어났다. 농민중 80%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그중 다시 50%는 어떻게 해야 부채에서 헤어날지를 모른채 불안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농촌경제의 어려움은 농민들을 도시로 무작정 떠나게 만들어, 과거 10년동안에 연평균 45만명씩 합계 450만명의 농가인구가 줄었다. 그래서 농촌에

**농민들이  
아무리 정치적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직화되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농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힘이 농민단체를 통해서  
집합되고 통합되어야 협상의 힘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는 빈집이 많다.

특히 젊은이들이 빠져나가 이제 농촌에는 주로 노인과 부녀자들이 남게 되었다. 그래서 강원도의 어떤 마을은 57가구가 사는데 최근 9년동안 단 한명의 아기도 태어나지 않아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마을이 되었다. 모처럼 어느 젊은이가 마음잡고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어도 장가들기가 어려워 살기 어려운 농촌이 되어 버렸다.

이상과 같은 농촌현실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그동안 그 많은 농민단체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농가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그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이다. 진실로 농민단체들은 반성해야 한다.

3. 농민단체의 대응방향

물론 지난날의 농민단체들이 그 구성원들의 권익을 올바르게 대변하지 못하고 경제적, 사회적 기능수행에만 안주(安住)한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는 있다. 5·16혁명이후 제5공화국이 끝날 때까지의 정치사회



환경이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도처에서 민주화, 자율화가 진행되고 있고 각계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농민단체들도 그에게 뒤져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농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농민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이를 정부, 입법기관, 언론기관, 소비자단체 등에 수시로 전달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필자가 보기엔 아직도 농민, 농촌, 농업의 실상이 올바르게 사회전체에 알려져 있지 않다. 농촌이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어려울리가...”라고 한다.

둘째, 농민들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농민들은 경제적 힘은 약해도 정치적 힘은 강하다. 일

본의 자민당이 농촌, 농민의 정책을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분(配分)상의 형평을 유지코자하는데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농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힘 때문이다.

농민들이 아무리 정치적 힘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조직화되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농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힘이 농민단체를 통해서 집합되고 통합되어야 협상의 힘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세째,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농민단체들의 집단적시표시도 필요하다. 특히 농축산물시장의 개방을 반대하는 시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의사표현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미국정부에 대한 한국농민들의 입장표시도 되는 것이다.

그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개방압력이 있을 때마다 도리어 농민단체들에게 그 고충을 설명하고 묵시적



(默示的)으로 농민들의 집단 반대시위까지 유도해냄을 보는 것이다.

네째,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농민의 어려움을 이해시키는 활동도 전개해야 한다. 농업, 농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 그것이 진실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도에 농지개혁을 할 때 농지소유 상한을 3ha로 묶었고 그후에는 농지의 타목적 전용을 제한하기 위해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업에 있어 가장 기본인 토지소유의 이용을 이처럼 제한한다는 것은 농업, 농민을 사회정책적인 대상으로라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과 서서비스업은 얼마든지 클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고 그들과 농업이 1대 1의 경쟁을 전제로 한 경제활동을 조장(助長)시키겠다는 정책은 처음부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업, 농촌정책이 사회정책의 시각에서 다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농민단체들은 재벌기업, 대기업에 대해서

“  
농민단체는  
재벌기업이 축산업에  
진출하거나 농축산물 수입으로 농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일은 막도록 설득하고  
안될때는 집단시위나 그 회사제품의  
불매운동도  
전개해야 한다.  
”

도 수시로 농촌, 농업, 농민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촉구하는 일도 해야 한다. 재벌기업이 축산업에 진출하거나 수입농산물 수입으로 농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일은 막도록 설득하고 안될 때는 집단시위나 그 회사제품의 불매운동도 전개해야 한다.

#### 4. 맺음말

우리는 지금 민주화과정에 있다. 이 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적 민주화가 달성되어야 꽃을 피우게 된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18.5%나 되는 농업인구가 모두 소외계층으로 남아 있는한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달성되기 어렵다.

일찌기 미국의 경제학자 「사이몬·쿠즈네츠」(Simon Kuznets)는 “한나라 경제는 농업을 희생시켜서 중진국까지는 갈 수 있지만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파(說破)한 바 있다.

이 점 때문에 일본도, 미국도, EC제국도 농업부문에 관한한 그것이 생산성도, 성장률도 모두 타산업보다 낮은 것을 알면서 끊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투입도

## ■ 농민을 살리자

막대하게 해오고 있는 것이다.

농업은 민족의 뿌리이며, 온 국민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통속적인 이야기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농업은 그것이 안정되고 발전되면 국가전체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부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농민은 자연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을 싫어하여 보수적이다. 지나친 기쁨도, 지나친 흥수도, 지나친 사회변동도 싫어한다. 또 농민은 그가 자본자요, 경영자요, 노동자이기 때문에 농업안에서는 노사분규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농민들은 그들의 불만이나 불이익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집단시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에 끝낸다. 공장노동자가 몇달씩 분규를 일으키고 쟁의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농민은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가축에 먹이를 주어야 하고 쪼을 짜야 하며 제때에 비료나 농약을 쳐야 한다. 농민들은 자기가 집단시위에 가담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뉴질랜드 라는 나라가 80%의 농축산업으로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사회학적인 의미의 「완전사회」(perfect society)를 이루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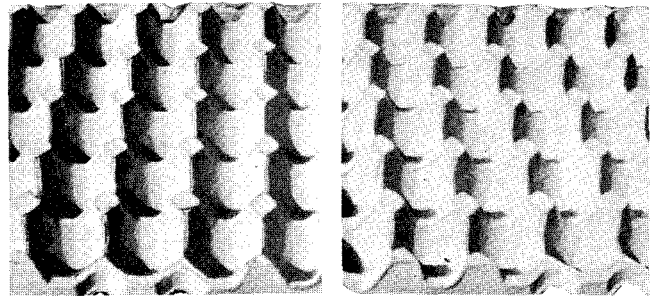
화란이나 프랑스, 스웨덴 같은 나라가 일정비율의 농축산업을 정책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농민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조직적, 집단적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정부나, 국회나 대기업집단이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그들을 돕고 지원하려는 슬기를 보여야 마땅하다. **양기**

# 종이난좌 를 사용하시면 달걀의 위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 규격 종이난좌의 특징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예방
4. 파란방지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제일성형공업사

공 장 : (0351) 63 - 7363 · 7097

연락처 : (02) 549 - 5287